

# 광주시·전남도 “조기추경·확장재정 필요” 한목소리

## 제60차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 강 시장 “확장 재정 절실한 상황” 김 지사 “상반기 추경 추진” 촉구 긴급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조기추경과 확장재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 민생안정에 앞장선다.

17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 목소리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안전 보고가 끝나고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강 시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완화 및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차질없이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17일 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강 시장은 “내년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추경과 확장재정을 하지 않는다면 민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21년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 예산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고 무

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영도 자치사무로 전환했으나 후속 조치 미비해 단속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자치경찰 운영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과 교육 사무를 일원화하면서 지자체가 재정과 인력을 모두 부담하는 불합리한 유보통합에 대한 시도지사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전남도 역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정부 추경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은 성립했으나, 증액 없는 감액예산이 통과되면서 전남의 SOC예산도 평소 1조2000억 원에서 7000억 원대로 감액되는 등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도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

진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만큼 내년 2~3월 이내에는 정부 추경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이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경우 제대로 된 추경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현재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생을 돌보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추경예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이 반으로 깎이는 등 소비심리가 급감함에 따라 코로나 상황 때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1인당 지원금 약 20만 원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조 원이 소요된다는 만큼 재원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펌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과 기회발전특구 등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 “실종된 ‘연말 특수’ 살아나길”...

1면서 계속 북구 중흥동의 한 맥줏집은 12월 매장 방문 고객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고, 크리스마스 기간(12월 23~25일) 주류를 2000원대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은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연시 이벤트를 진행하며 단체 손님 모시기에 나섰다.

정치권·금융권 등 각계에서도 송년회 재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은 탄핵안 가결 이후 “송년회 재개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동참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2024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통해 선결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재방문 약속’을 의미하는 선결제를 확산함으로써 식자재

비, 월세, 공공요금 등 자영업자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선결제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상인 배모(60)씨는 “장부를 적어두고 당일·후불 결제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선결제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 선결제는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이니 업주 입장에서 안심이 될뿐만 아니라 선금을 받는 것이니 매장 운영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된다. 상인들을 위한 착한 선결제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시정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8월 달 지방재정 적극 활용 지침 공문에 선결제를 독려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시에서 장려하지는 않았다. 선결제가 업무추진비 규정상 감사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민주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尹 신속히 파면”

## 공식 출범... “국정 혼란 수습”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철저한 내란 수사, 외교·안보·민생·경제 위기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내란극복 특위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 말하고 싶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청문회까지 이미 합의된 헌법재판관 임명에 시비를 걸며 헌

법재판소 결정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려는 내란 잔당으로 몰락의 길을 작정한 것인가”라며 “내란 극복을 위한 국민 안정의 길에 원내 2당으로서 양심이 있는 행보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권력을 대통령과 국회로 나눠줬는데 이 중 대통령이 중대한 내란 범죄를 저질러 국가 권력의 한 축이 무너졌다”면서 “국민의 안정은 결국 민생 안정인 만큼 민생을 잘 파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언론은 비상계엄과 소비 침체, 환율이 내수 경제를 덮쳐 삼각파도라고 지적한다. 특히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내수 경기에 짙은 암흑이 드리

웠으며 코로나때보다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윤석열은 오히려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한 친일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이 상황이 바로 내란사태다.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위의 활동 기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시기까지는 내란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 그 여진들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방해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안전과 절제라는 태도를 갖고 국정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영산강 등 하구 생태복원’ 정부과제로 추진을”

## 도청서 전국 335개 기관 토론회

### 낙동강 하굿둑 개방 효과 가시화 생태계 복원 국정 우선순위 추진 “차기 대선시 국정과제 채택 노력”

‘영산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17일 전남도청 대강당에서 지자체, 의회, 학계, 연구기관, 농업업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가하구 생태복원 전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토론회는 1981년 영산강을

시작으로 1990년 금강 하굿둑 완공 이후 수질 악화를 비롯 토사 퇴적, 기수역 상실, 서남해안 수산업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실증적인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영산강 하굿둑 건설 이후 최초로 전남도,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전남 부여군 등 행정기관이 공동 주최했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비롯 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하구기수보전협의회,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공동 주관해 이목이 집중됐다.

전국회의 상임고문인 허재영 초대 국가물관리위원회장은 개회사에서 “물과 생태계 순환의 단절은 기후재난과 사회적 불평등

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국가하구 등 훼손된 생태계 복원이 국정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국정의 주요과제”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을 비롯 박수현, 이우용, 황명선, 문금주, 서왕진, 전종덕 의원 등은 영산강 서면 측사를 통해 “환노위와 농해수위를 비롯 국회차원의 법적 정비와 함께 관련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박정현 부여군수는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실증적 대안 마련 등

낙동강 하굿둑 상시개방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취·양수장 전역 국비 이전 등 국가하구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초광역 차원의 민관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는 “영산강 하구는 부분해수유통과 통선문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전남형 6차산업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공간”이라며 “피항 기능과 역사문화·생태관광산업 벨트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소멸 완충의 진수적 정책비전과 전남 서남권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회도 개최됐다. 종합토론회에는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김종일 전남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배상태 전 가톨릭농민회 전국회장과 김종주(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역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하굿둑 건설 이후 서남해

연안어업 붕괴를 비롯 수질 악화, 녹조 독소 발생으로 국민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민관협력으로 영산강,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추진하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규권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국가하구 복원 관련 특별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으나 법안경정으로 무산됐다”면서 “통합법안 마련과 국가하구생태복원이 차기 대선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영산강 하구를 비롯 연안 생태계 보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하구 생태복원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함께, 국가하구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오지현 기자